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 주간 북한경제 동향

##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8년 12월 8일(월)  
통권1호(제1권 제19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화 02-782-2677  
팩스 02-3452-2312  
이메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 잘못된 대북정책 시정에 모두가 나서야

지난 주 본란은 악화된 남북관계 타개책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개선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초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아직도 이 정부는 압박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이 나서서 그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압박을 계속하면 결국은 북한이 손을 들 것이라고 믿은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까지 몰아붙였다. 하지만 먼저 손을 든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부시 정부는 대북 압박이 핵무장의 또 다른 원인이 됐음을 깨닫게 됐다. 이후 부시 정부는 압박보다 대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압박이 아니라 대화라는 사실을 6년이란 시간을 허송한 후에야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결과 압박정책을 갈수록 노골화하며, 이를 답습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의 잘못된 대북정책 기초를 세우고, 추진해 온 사람들에게 대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정부질문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청와대 측근과 소위 ‘비핵·개방 3000’이라는 압박정책을 입안한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

개성공단의 실질적 폐쇄로 입주 혹은 입주예정기업은 물론 남측에 있는 협력 기업들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예상된다. 이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시정요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류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남북관계의 파탄은 특정 계층, 집단, 지역에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

니다. 정당, 사회단체, 개인을 막론하고 힘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제 정당, 사회단체들의 연대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들의 참여가 단순한 사진 찍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의 재개와 대북정책의 전향적 전환을 주문해야 한다.

둘째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대비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단언하건데, 부시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교류와 협력의 남북관계는 복원될 수밖에 없다. 그때를 대비한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

먼저 개성공단을 비롯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경협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에서 실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노무 관련 규정 미비나 숙소 건립 건으로 표면화된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원부자재 공급과 판로를 남쪽에 의지함으로써 나타났던 생산비 절감의 한계나 남북의 산업적 연관성 결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차제에 남북경협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해야 한다. 남북경협사업의 경우 일반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이는 『남북협력기금법』과 관련 법규를 손질하여 『대북투자 전문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또 남북간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현실에서 ‘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이행담보금예치제’라는 에스스로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자발적으로는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분명해졌다. 하지만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행동과 준비. 이것이 기로에 선 남북관계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요구하는 외침이다.

▶제19호 목 차

**이주의 칼럼**  
 남북관계 경색 : 북한의 의도와 남한의 대응 ----- 2

**이주의 주요 기사**  
 “北 남북통행 제한으로 더 고립될 것”<LAT> ----- 3  
 金통일 “언제 · 어디서 · 어떤 급이든 대화하자” ----- 4  
 개성공단 입주기업 ‘시름시름’ ----- 5  
 북한, 평양에 이달 중 휴대전화 개통 ----- 6  
 개성공단中 11월 매출 60% 감소...피해보상 받나 ----- 7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당분간 자제 ----- 8  
 北 12.1조치 1주일...어떻게 달라졌나 ----- 9  
 6자회담, 5개월만에 재개...검증의정서 채택 여부가 초점 ----- 10  
 NKorea vows to exclude Japan from nuclear talks ----- 10  
 「日米關係良好」過去最低 內閣府世論調査 ----- 10  
 추천논문 / 2008년 4/4분기 한반도 안보지수(KSPI) 조사 결과 ---- 11  
 함께 보는 최근 북안단신 / ----- 11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 2008 추계 개성공단법제 학술회의  
 ▶주제:지속가능한 개성공단사업 위한 현안법제 정비방안  
 ▶일시 : 2008년 12월 11일(목) 09: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2008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  
 ▶주제 : 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통합  
 ▶일시 : 2008년 12월 11일(목) 14: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 남북협력사업발전연구회 공동 세미나  
 ▶주제 : 오바마 정부 출범과 남북경제공동체의 진로 ; 교통 인프라 분야의 과제  
 ▶일시 : 2008년 12월 11(목) 14:00~17:30  
 ▶장소 : 한국관광공사 3층 백두실
- 동북아물류인프라 투자정책 제언 정책토론회  
 ▶주제 : 대륙 물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동아시아 교통 인프라 구축방안  
 ▶일시 : 2008년 12월 15(월) 10:00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이 주의 칼럼

**남북관계 경색 : 북한의 의도와 남한의 대응**

박형중(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남북당국간에는 과거에도 관계 중단 사례가 있었다.

2001년 부시 대통령 등장 이후, 2004년 한국으로의 탈북자 대량 송환 이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개혁적 개방적인 방향이었고, 한국 측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국정의 중요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국관계 재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08년도의 경우는 다르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따라서 남북간의 단계적 긴장 고조 및 현재와 같은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2008년 초부터 예견되어 왔던 사태라고 할 수 있다.

2008년도 말 남과 북은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다. 어느 한 쪽이 정책 입장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입장을 먼저 바꾸는 쪽은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현재의 긴장 고조 국면은 2009년도 전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며, 어느 때인가 최고점을 통과할 것이다.

2009년도 전반기 동안 북한은 가능한 한 미국과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킴으로써, 한국정부를 곤궁에 빠지게 만들고자 시도할 수 있다. 한국정부도 미국의 새로운 담당자들과 정책 협의를 강화하게 될 것이며, 한미동맹 강화와 협조를 과시하고자 할 것이다.

남북한이 상호 전략적으로 타협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색국면은 장기화될 수 있다. 현재의 대치 국면에서 보자면, 남과 북이 정책적으로 타협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경우 남과 북 모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 북한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현 정책 주도 그룹이 1990년대 이래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2년 7.1 조치 등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발생한 변화의 확장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부정책은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부 불만 강화와 경제위축을 초래하고, 이를 대외 긴장조성을 통해 다스리고자하는 충동을 발생시킨다.

한편, 한국은 북한당국과의 거래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대북정책에서 현 북한당국의 우려와 약점을 적절하게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의 경색은 북한당국의 대내정치 의도에 본의 아니게 협조해 주어버리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게는 명분을 주고, 우리는 실리를 찾는 식의 해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법에서 남북 양측 모두의 체면과 명분이 존중되어야 한다.

가능한 현실적 해법은 ‘6.15와 10.4 선언’을 양측이 준수하는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남북간 거래관계가 과거보다는 한 발짝 국제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채우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당국의 우려와 수요에 대해 배려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inu.or.kr/issue/index.jsp?bid=DATA01&page=1&num=471&mode=view&category=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北 방송, 佛투자 北시멘트공장 “높은 생산실적”

-- 12월 1일 연합뉴스

프랑스의 시멘트업체 라파즈사가 이집트 오라스콧그룹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투자한 북한의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가 올해 설비 개선과 함께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30일 보도했다. 방송은 상원기업소 근로자들이 “소성로와 미분탄 공정, 냉각기 계통의 전기설비들을 개진하기 위한 사업과 설비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밀고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세멘트는 또 석회석 광산의 채굴 설비들과 운수수단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과 소성로, 석탄분쇄기의 설비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투쟁도 벌여나가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오라스콧은 지난해 7월 상원세멘트의 지분 50%를 취득하면서 1억1천5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공장 지분과 탄광 채굴권을 라파즈사에 넘겼다.

라파즈사는 지난 9월 “북한에서 시멘트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상원세멘트 공장의 잠재력이 크다”며 공장 설비를 최신 것으로 바꾸고 기계와 시설 투자를 확대해 2010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300만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광산·전력 부문 투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北 “라면 대량생산 통해 식생활 개선한다”

-- 12월 1일 연합뉴스

1일 북한을 상대로 무역과 임가공사업을 하는 대북 사업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인민들에게 라면을 대량 공급하고 외화벌이도 하기 위해 라면공장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평양시 락랑구역 통일거리 옆 전진동 3만평 부지를 한국의 대북사업체인 (주)G-한신에 제공하고 하루 빨리 라면 대량생산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전종무 (주)G-한신 대표는 “지난달 21일 통일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면서 “우선 2천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공장이 완공되면 월간 최대 1천80만 봉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50%는 주민들 공급용으로 배급하고 나머지 50%는 한국 등 외국시장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북한에서는 감자농사가 대풍을 이뤘다”면서 “감자 전분과 송이 등 무공해 농수산물을 원료로 라면을 만들어 ‘송이라면’이라는 상표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질 좋고 맛있는 라면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수프”라면서 “송이를 가미한 라면 수프는 한국의 유명 대형 식품업체가 기술개발에 참여했

다”고 말했다.

北 방송 “유망 지하자원 매장 다수 발견”

-- 12월 1일 연합뉴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30일 북한 각 도의 탐사관리국 산하 지질탐사대가 최근 탐사를 활발히 벌여 개발이 유망한 지하자원 매장지들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평안남도의 탐사관리국의 탐사대들은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 매장지를 많이 확보”했고, 황해남도과 강원도의 탐사대들은 “철광석 탐사에서 실적”을 올렸으며, 양강도의 탐사대들은 “유색금속 광물탐사에서 유망한 광물 후보지를 마련”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또 함경남도 탐사관리국의 만담산 지질탐사단은 검덕 지구에서 커다란 광물 매장지를, 수문지질탐사대는 ‘물원천’을 각각 발견했으며, 평안북도의 여러 탐사대도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적극적)으로 내밀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방송은 그러나 이들 탐사대가 찾아냈다는 지하자원의 종류나 장소, 매장량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北 남북통행 제한으로 더 고립될 것” <LAT>

-- 12월 2일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 간 육로통행을 대폭 제한한 '12.1 조치'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1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의 이번 조치로 수십 년간의 대치 끝에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의 희망을 다시 살렸던 남북 관계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면서 그같이 전했다.

남북 간의 긴장관계는 지난 2월 한국에 보수정권이 출범한 후 고조되기 시작해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한국 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심화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은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북한은 만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남북 간 통행이 대폭 제한됐지만 개성공단은 여전히 남북 간의 중요한 교섭수단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자본주의 승리의 상징처럼 비치는 개성공단을 폐쇄해 한국에 굴욕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한 푼이 아쉬운 가난한 나라인 북한에서 3만5천 명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개성공단을 쉽게 폐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생산 필수인력만 남긴 셈

-- 12월 2일 중앙일보

북한이 1일 개성공단에서 최소한의 기업 운영만을 허용하는 선까지로 상주 인원을 축소했다. 공단을 통해 북한이 얻는 수익은 유지하되 생산과 직결되지 않는 ‘비필수’ 남측 인원은 대폭 줄여 남한발 자본주의 바람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이 통보한 개성공단 쿼터는 880명이다. 당초 공단 현지에서 진행됐던 남북 협의에선 1620여 명 선에서 상주 허용 인원 윤곽이 잡혔다. 그러나 전날 밤 평양에서 내려온 최종 허용 인원은 이 절반으로 대폭 줄었다. 북한은 880명 중 800명을 80여 곳의 제조·건설업체에 배정했다. 건설업체도 입주 기업의 건물 개·보수 등에 투입되는 만큼 생산과 연관된 남측 인력만을 주로 허용한 셈이다. 반면 생산에 직결되지 않는 부대 업체, 지원 기관에는 전원 철수를 요구하거나 전면 통제에 나서 남측의 입김 차단을 시도했다.

공단 입주 기업들을 관리하며 우리 정부의 창구 역할을 해 온 관리위원회와 공기업인 토지공사는 각각 53명 중 27명, 15명 중 4명만을 남기도록 했다. 공단 내 노래방·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자본주의적 유흥시설’ 인원은 모두 나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산 인력 외에 남는 ‘간접 인원’은 관리위원회와 토지공사를 비롯해 병원·소방대·식당·숙소 등 어쩔 수 없이 남아야 하는 80명으로 한정됐다.

“北 국제금융 편입엔 투명성 필수” <美고위관리>

-- 12월 2일 연합뉴스

북한이 국제금융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북핵 6자 회담의 진전을 포함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별개로 국제금융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미 재무부의 패트릭 오브라이언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가 밝혔다.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1일 미 재무부 주관으로 열린 ‘도둑체제(Kleptocracy)’에 관한 민관 합동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국제금융 체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같은 국제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의 신뢰를 얻어야 하지만 이는 짧은 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또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후에도 미국의 북한관련 자산이 여전히 동결상태인 점에 대해 “이 문제는 국무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하며 특히 고위층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월 의회에 제출한 테러관련 국가·조직의 미국내 자산동결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동결자산을 3천200만 달러로 추산했다.

北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대북특사 수용불가”

-- 12월 2일 연합뉴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북특사 파견 방안에 대해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 연계된 어떤 대북특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성 정책위의부장이 2일 주장했다.

민주당 남북관계 현안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최 부의장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최근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박근혜 특사론’에 대해 최근 평양에서 만난 북측 핵심인사는 ‘박 전 대표는 그동안 북한체제에 대해 너무도 많은 비난을 했는데 무슨 염치로 대북특사를 하려고 하느냐. 남쪽 정치인은 입지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랴도 하겠다고 하느냐. 현재로서는 이명박 정부와 연계된 그 어떤 대북특사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박 전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DJ-박근혜 공동 특사론’에 대해서도 “DJ 대북 특사론은 박근혜 특사론과 함께 한나라당 내부에서 먼저 제기됐다”면서 “DJ의 경륜과 북측의 신뢰를 적극 활용하자는 순수한 의도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하에서 소외받고 있는 ‘박근혜 중용론과 박근혜 대망론’을 희망하는 그룹의 정치적 목적이 결합돼 있는 듯 했지만 본질은 시간이 흐르면서 후자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송통일 “언제·어디서·어떤 급이든 대화하자”

-- 12월 2일 연합뉴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일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급에서건 대화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며 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미국 신정부 출범과 대북·통일정책 추진 방향’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남북한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다면 틀림없이 남북이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어주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남북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적 합의”라며 “특히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합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갈리고 남남갈등을 빚는다면 정부가 일관되게 나아가기가 어려워며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의 '12.1조치'에 대해 "이러한 조치는 6.15공동선언에 입각해 추진됐던 여러 사업들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이행을 주장하는 10.4선언 합의내용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시름시름'

-- 12월 2일 노컷뉴스

북한이 이른바 12.1 조치와 함께 개성공단 내 남측 상주인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주인원 축소에 따른 생산차질은 물론 개성공단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거래처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주 취소와 대출연장 거절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A업체 강모 이사는 "이달 들어 예고한 대로 통행·통관 절차가 극도로 까다로워 졌다"며 "이전에는 소지품 검사가 형식적이었지만 지금은 업무적으로 필요한 인쇄물까지 철저히 검사한다"고 통관 분위기를 전했다. 잡지와 책자는 물론 CD와 MP3 등 전자기기까지 샅샅이 통제한다는 것. 강 이사는 "특히 예전 같으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다 하더라도 미화 10달러 정도의 벌금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바로 추방명령을 받는다"며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위축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며 매년 7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B업체는 최근 거래처의 전화문의와 확인방문이 부쩍 늘었다. 개성공단이 최악의 경우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부터 납기는 제대로 맞출 수 있느냐는 독촉성 전화까지 하루에도 수차례씩 거래처의 전화와 방문이 이어진다. B업체 홍모 부장은 "현재 남북관계가 이런 형편이니 거래처 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일부 거래처에는 최근 발주물량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장은 또 "제조물량의 85%를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데 물량이 한꺼번에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 두렵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걱정은 거래처뿐만이 아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중기 대출을 큰 폭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홍 부장은 "지난달에 겨우겨우 대출 만기연장을 받았지만 앞으로 장담을 못하는 게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개성공단 폐쇄보다 먼저 주저앉을지도 모른

다"고 한숨을 쉬었다. 상황이 이러니 신규투자는 꿈도 꾸지 못한다.

대부분 입주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통관절차 강화와 상주인원 축소로 생산활동이 직접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도 큰 부담이다.

"북한 여성은 '은하수'를 발라요"

-- 12월 3일 노컷뉴스

북한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한 '은하수' 화장품이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조종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3일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는 기능성 화장품인 '은하수' 키토산 살결물(로션), 알로에 살결물, 썬 살결물, 알로에 크림, 썬 크림 등 12종의 기능성 건강화장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키토산 살결물(스킨 로션)은 카르복시메틸키토산의 우수한 보습, 피막형성작용으로 피부의 수분증발을 막고 탄성 보습막을 형성해 피부를 희고 부드럽게 해주고 알로에 크림은 뛰어난 보습능력과 신비한 미백, 항균작용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의 수분균형을 조절하는 건강화장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평양화장품공장 전기화 사장(53)은 "피부와 약리적 효과가 큰 기능성화장품들을 계속 개발해 은하수 화장품을 국내(북한) 제일의 화장품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평양화장품공장은 "피부건강과 피부 영양에 좋은 화장품과 함께 병원성 세균을 완전히 살균하는 치약과 머리칼의 영양성분을 보충해 머리칼이 빠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각종 치료용 화장품들도 만들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北산림황폐 방지시 40년뒤 한그루도 안남아"<加단체>

-- 12월 3일 연합뉴스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현 상태로 지속된다면 2050년엔 북한에 "한 그루의 나무도 찾아볼 수 없을지" 모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므로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장기계획이 절실하다고 캐나다의 대북 지원단체인 '퍼스트 스텝스'의 수잔 리치 대표가 3일 주장했다.

리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의 환경과피와 식량안보' 주제 세미나에서 지난 2005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를 인용해 1990~2005년 북한 산림의 25%가 황폐화됐다고 이같이 말하고 산림 황폐화는 "북한의 식량안보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산림 황폐화와 홍수,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북한의 어린이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북한에) 나무를 심으면 (북한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1년 설립된 퍼스트 스텝스는 평양 형제산구역, 남포, 원산 등에 콩우유 설비와 재료를 지원해 북한 어린이 7만명의 급식을 돕는 한편, 그외 지역에서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미량 영양소도 지원하고 있다.

북한, 평양에 이달 중 휴대전화 개통

-- 12월 3일 노컷뉴스

이달 중에 평양에 휴대전화가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소리 방송은 3일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오는 15일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투자 설명회를 하고 평양에 휴대전화를 개통과 고속인터넷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라스콤 텔레콤’은 “초기단계에서 평양에서 15만 명의 가입자를 신청받고 앞으로 다른 도시에도 곧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 상반기에 평양 외교대표부와 외국단체들에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평양에서 가장 높은 105층 규모의 유경호텔 공사를 맡고 있는 ‘오라스콤 텔레콤’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유경호텔에 입주하게 되며, 류경호텔은 국제실업센터로 바뀌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도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12월 중에 평양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기기 한대에 700달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지난 2004년 용천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평양 등 일부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왔다.

현대아산, 정부 적극적 지원 요청

-- 12월 4일 연합뉴스

현대아산은 금강산에 이어 개성 관광마저 중단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4일 현대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남북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이고 대담한 조치를 촉구하고,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2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현대아산은 탄원서를 통해 남북경협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의 고충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건의했으며, 현대아산을 비롯해 영세한 협력업체들의 생존보장과

사업 재개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및 인프라 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난 10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자했으나, 금강산관광 중단에 이어 개성관광까지 중단돼 올해 말까지 현대아산은 865억원, 협력업체는 21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개성공단 위축으로 공장 건축 등에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대아산측은 “매출 손실을 최소화하고 생존하기 위해 국내 건설부문의 강화와 가능한 자구책을 취하고 있지만 현대아산 혼자의 힘만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획기적이고 대담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柳외교 “북핵문서에 ‘시료채취’ 표현돼야”

-- 12월 4일 연합뉴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차기 북핵 6자회담과 관련, “회담에서 채택할 북핵 검증 관련 합의문에 ‘시료채취(sampling)’가 표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서울 도림동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시료채취를 한 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행위가 보장된다는게 6자간에 확인이 되고, 그것이 문서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시료채취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지 문서화해야 된다는게 한.미.일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문서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협상의 기술로 남겨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일정에 동의한 만큼 8일 베이징에서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북핵 검증 이행 계획서에 합의하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상응조치를 마무리하는 계획을 도출하는 것이 회담의 목표라고 소개했다.

북한, 작년 자연재해 피해규모 세계 2위

-- 12월 4일 중앙일보

북한이 지난해 자연재해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의 하나로 꼽혔다.

독일의 환경단체인 저먼워치는 4일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회의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먼워치가 공개한 ‘글로벌 기후리스크 지수’는 국가의 경제와 인구 규모와 비교해 자연재해의 피해를 평가한 것으로 방글라데시, 북한, 니카라과, 오만, 파키스탄이 상위 5개국에 포함됐다.

저면위치의 스벤 하르멜링은 절대적 피해 규모만 따지면 선진국의 피해가 크지만 국가의 경제와 인구 규모와 비교하면 개발도상국이 훨씬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라며 자연재해에 대한 특정 국가의 취약성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수는 독일의 세계적인 재보험사인 뮌헨 리의 장기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망자수와 인구당 사망자수에 각각 4분의 1, 피해액에 6분의 1, 국내총생산(GDP)와 비교한 피해액에 3분의 1의 가중치를 두고 산정한 것이다.

**개성공단中 11월 매출 60% 감소...피해보상 받나**

-- 12월 5일 중앙일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매출액이 줄었다며 정부에 손실보상을 요구하기로 해 입주기업인의 피해보상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5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남북간 긴장 악화로 개성공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국내외 바이어들이 발주량을 줄임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9월부터 3개월간 모두 1천10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11월 매출액이 예년과 비교해 9월에는 30%, 10월 40%, 지난달에는 60% 주는 등 감소폭이 갈수록 커져 남북관계 긴장국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입주기업인의 어려움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입주기업협의회 측은 내다봤다.

입주기업협의회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인들의 피해액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정식으로 손실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입주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부지를 분양받았을 때 이곳에서 50년간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라면서 “그런데 최근 남북 양측이 기업경영 분위기를 악화시켜 손해를 봤으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기업인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보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부 “대북식량지원, 국제기구 보고서 토대로 결정”**

-- 12월 5일 뉴시스

정부는 5일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식량 평가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북한이 대남 강경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며칠 전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국회 질의 답변으로 같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달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식량 사정 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자료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차단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 “예년과 달리 홍수 등의 피해가 없어 비교적 작황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면 비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옥수수 등 일부 곡물은 조금 안 좋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닭 왔어요” 평양 ‘이동 부식 매대’ 인기**

-- 12월 5일 노컷뉴스

‘딸랑딸랑~’ 북한 평양시 모란봉 구역 전승동과 흥부동 일대 살림집(아파트) 단지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동 부식 매대에서 울리는 종소리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평양시내 구역(남쪽 구 단위)의 식료상점들이 운영하는 매대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주부들이 그릇을 들고 나와 매대에서 국과 여러 가지 가공 부식물을 구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일 오전 오후 6~7시 사이에 식료품 상점에서 만든 계절에 맞는 김치와 통닭구이, 가자미튀김, 식혜, 콩나물찬, 두부튀김 등 하루 평균 200~300kg의 가공 부식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문판매도 한다고 말했다.

조선신보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종합식료상점 산하 흥부식료품상점 등에서는 간장, 된장, 기름 등 기초식품과 고기 등 식료품을 나라에서 공급받아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구역 채과도매소와 남새상점, 수산물상점들에서 주민들에 대한 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을 받아 상점의 가공반에서 여러가지 가공 부식물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평양 경협, 지원사업은 진행중”**

-- 12월 5일 연합뉴스

통일부는 5일 남북간 육로통행의 제한·차단을 담은 12.1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평양에서의 각종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양에서의 경협사업 현황에 대해 “기업들의 경우 특별히 (사업이) 지연 또는 연기된다는 보고가 없었다”며 “예정대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평양에서 이뤄지는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평양 병원공사 지원을 위해

3~23일 일정으로 방북했고 다른 3~4개 단체들도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다만 일부 단체들의 경우 연말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내년에 다시 협의하자는 요청이 온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北라선시 경공업 공장들 생산 정상화 박차 <北방송>

-- 12월 5일 연합뉴스

지난 1991년 ‘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됐던 북한의 라선(라진.선봉)시의 경공업공장들이 생산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5일 전했다.

이 방송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두 달이나 앞당겨 끝낸 라진음료공장과 라선어린이식료품공장, 라선식료공장, 라진가구공장, 라선제지공장, 선봉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라진가방공장의 일꾼과 노동자가 혁신의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 공장에선 “원료와 자재보장 사업을 앞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 들어 날마다 맛있는 식료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철도연결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러시아가 라진항 개발사업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라선시가 다시 경제적 활기를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지난 9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에 전시된 경공업 생필품 총 3만여점 가운데 라선시의 70여개 공장과 기업소에서 생산된 게 “350여종 수 만점”이라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0월2일 보도함으로써 라선시 제품들이 전시품의 대부분을 차지했음을 시사했다.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당분간 자제

-- 12월 5일 연합뉴스

북한관련 민간단체들은 5일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을 불러온 대북 전단(빠라) 살포를 당분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성용 남북자가족모임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박희태 대표를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 대표가 최근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강경조치를 취하는 것을 감안해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당분간 자제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우리 단체의 충정을 이해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남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우리 결정은 북한의 대남협박이나 남한내 친북좌파세력의 방해공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 강조했다.

北에 ‘머슴노동’ ‘계절노동’ ‘방문판매’ 만연

-- 12월 5일 중앙일보

부유한 집의 잡일을 해주는 ‘머슴식’ 노동, 각종 국가 동원 사업에 대신 나가주는 ‘동원 노동’, 농번기 소작농처럼 고용계약을 하는 ‘계절노동’.

현재 북한에선 많은 노동자들이 국가가 정해준 자신들의 직장에서 벗어나 이런 일로 생계를 해결하는 ‘일탈 노동’이 증대하고 있어 1990년대 중반 이전과 같은 직업구분은 무의미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자를 외화벌이에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브로커’ 활동도 부업의 한 형태로 성행해 ‘자생적 노동시장’도 형성중이라는 것.

교수, 교사, 의사 등 북한의 지식인들도 직장 근무시간의 절반 가까이 되는 시간을 개인장사와 관련된 일에 할애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시간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기관의 관리책임자와 흥정을 통해 장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수면과 식사 시간 등 기본적인 휴식시간을 줄여서까지 개인적인 시간 대부분을 개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북한사회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 당국이 2006년부터 장사 연령 제한과 시장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돼기발 경작을 금지하고 종합시장도 없애는 방침을 발표한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관측된다.

北, 12.1조치전 민경련 베이징사무소 재가동

-- 12월 6일 연합뉴스

북한의 ‘12.1조치’로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가 폐쇄되기 직전 북한이 또 다른 대북사업 협의채널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베이징 사무소에 직원을 다시 상주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부와 업계의 남북경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이후 직원이 자리하지 않았던 민경련 베이징 사무소에 11월말부터 실무 직원이 상주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사업 컨설팅업체인 포원비즈의 김병수 대표는 “임시로 나와 있던 삼천리 총회사 관계자가 10월 중순 떠난 이후 직원이 근무하지 않았던 민경련 베이징 사무소에 12.1조치 사흘전 쯤부터 실무 직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 경협협회사무소를 폐쇄한 후에도 남북경협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자

체 계획에 따라 직원을 파견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경련 베이징 사무소는 대북교역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민경련 단둥(丹東) 대표부와 달리 IT관련 업무로 특화돼 있다.

北 12.1조치 1주일...어떻게 달라졌나

-- 12월 7일 연합뉴스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북한의 12.1 조치가 시행된지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개성공단과 기타 남북 경협,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 등 분야별 영향도 가시화 하고 있다.

북측이 ‘기업활동을 특별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혔던 개성공단은 통행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협·교역 업체들은 남북경협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의 폐쇄로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감수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

◇개성공단, 통행시간·인원 제한으로 타격 = 북한은 애초 12.1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기업활동을 특별적으로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남북 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개성공단이 북측의 고강도 통행 제한 조치의 영향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인다.

기업들로선 상주인원 제한(총 880명)도 불편하지만 그 보다는 통행횟수가 편도기준으로 하루 19회에서 6회로 줄어들고 통행 가능인원이 매 시간대별로 인원 250명, 차량 150대 이하로 감소된데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고 7일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경협·교역 업체들 경협사무소 부재로 불편 =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 경협 또는 교역 사업자들은 북측 파트너와의 협의 채널인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가 폐쇄되면서 시간적·공간적 불편을 겪고 있다.

이전처럼 개성에서 북측 사업 파트너와 만날 수 없게 됐고 샘플을 주고받을 때도 경협사무소를 통할 경우 2~3일이면 충분하던 것이 단둥의 북한 무역대표부를 통하게 되면서 일주일씩 걸리게 된 것이다.

◇사회문화 교류는 명맥 유지 = 상거래와 교류협력 목적의 육로통행을 차단하는 12.1 조치로 인해 개성과 금강산에서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손종도 부장은 “12.1 조치 이후 개성·금강산 지역에서 북측과 접촉하기는 어려워 졌다”면서 “12월 중 방북 행사를 가지려고 북측에 타진을 했는데 북측이 난색을 표해 행사를 내년으로 미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평양에서의 교류협력사업들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6자회담, 5개월만에 재개...검증의정서 채택 여부가 초점

-- 12월 8일 뉴시스

북핵 6자회담이 7월 이후 5개월여만인 8일 오후 3시(이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개막한다.

남·북·미·일·중·러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검증의정서 채택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와 공여국 5자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관련 시간계획서 마련 ▲비핵화 3단계 진입을 위한 초기 의견 교환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참가국들은 핵심 현안인 ‘시료 채취’ 명문화 등 ‘검증의정서’ 합의·채택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북한은 “시료 채취는 검증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현 단계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반면 한·미·일 등은 “북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위해 검증의정서에 시료 채취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6자회담에서는 양측이 이같은 이견을 조율, 검증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을 지가 초점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6자회담 합의문 이외의 부속 문서(비공개 양해각서)에 이 내용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참가국들은 또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가 지체되고 있는 핵 불능화와 이에 상응하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대한 시간표를 마련하고 3단계 핵 포기 진입을 위한 초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SKorean businesses suffer setback since border clampdown

남북 군사분계선 단속 이후 개성공단의 남한 기업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 12월 6일 AFP

출처:[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ingHTbu\\_9gMm251XCfgOQHdKDwpg](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ingHTbu_9gMm251XCfgOQHdKDwpg)

South Korean factories at a joint industrial estate in North Korea are losing orders because of growing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ccording to officials.

The North, which for months has been blasting what it calls Seoul's confrontational attitude, on Monday imposed strict border controls and ordered the expulsion of hundreds of South Koreans working at the Kaesong estate.

The communist state is also angry at the spreading of propaganda leaflets across the border by Seoul rights activists.

The activists said Friday they would suspend the leaflet launches to give the North a chance to change its attitude.

Kaesong, just north of the heavily fortified border, was seen as a potential model for joint projects -- with the North providing the cheap labour which the South lacks and Seoul providing the investment and know-how.

.....

개성공단의 남한 측 기업들이 남북 양측의 긴장이 체고 뒀에 따라 점차 정상을 잃어가고 있다. 북한은 수개월간 남한 측의 대결적인 자세를 비난해왔으며 지난 월요일에는 군사분계선의 통제를 강화하고 수백의 공단 내 남측 인사를 추방했다. 또한 북측은 남한의 우익인사들에 의한 대북 선전 뼈라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개성은 북의 노동력과 남의 투자와 노하우가 결합한 모델로서 보여졌으나, 공단의 입주기업들은 긴장이 고조된 지난 달 이후 20~30%의 영업 활동이 위축되었음을 밝힌다

NKorea vows to exclude Japan from nuclear talks  
북한이 핵 회담에서 일본의 배제를 결의함

-- 12월 6일 AP

출처: <http://www.google.com/hostednews/ap/article/ALeqM5jF1HEgi4-DqrqoCfxtPsIXiqBCwD94T60OG0>

North Korea vowed Saturday to exclude Japan from talks aimed at ending the North's nuclear programs, in apparent retaliation for Tokyo's refusal to contribute to an economic aid package for the communist regime.

The comments carried by the country's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came as negotiators prepared to meet Monday in Beijing. The six-nation talks have stalled over how to verify North Korea's accounting of its nuclear programs.

"We will neither treat Japan as a party to the talks nor deal with it even if it impudently appears in the conference room," the agency quoted an unidentified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 spokesman as saying.

North Korea has issued similar warnings to Japan in the past, but Tokyo has continued to attend the negotiations.

Officials at Japan's Foreign Ministry could not be reached for comment Saturday. Top South Korean nuclear envoy Kim Sook told The Associated Press that the talks should include all six nations. He declined to elaborate.

.....

북한이 일본이 대북 경제 원조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토요일 6자 회담에서 일본이 배제하여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언급은 다음 월요일 열릴 예정인 베이징에서의 6자 회담에 앞서 조전중양통신을 통해 전해졌다.

북한은 일본을 논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담장에 참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일본은 6자 회담에 참석해왔다. 이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반응은 전

해지지 않았으나, 남한 측의 수석대표인 김숙은 모든 6개국 이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日米関係良好」過去最低 内閣府世論調査

내각부 여론 조사 결과 「미일 관계 양호도」 과거 최저

-- 12월 7일 산케이신문

출처 : <http://sankei.jp.msn.com/world/korea/081201/kor0812010123002-n1.htm>

日本と米国との関係が良好ではないとみる人が増えていることが、内閣府が6日に発表した「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で明らかになった。「良好」との回答は昨年10月の前回調査から7.4ポイント減の68.9%で、質問が現在の項目となった平成10年以降で初めて7割を切り、過去最低となった。「良好だとは思わない」との回答も、7.7ポイント増の28.1%だった。

外務省は、調査時期に米国が北朝鮮へのテロ支援国家指定を解除したことなどが影響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みている。

また、日中関係では「良好」が前回より2.7ポイント減の23.7%で、逆に「良好だとは思わない」は、3.9ポイント増の71.9%と7割を突破した。「中国に親しみを感じない」も過去最高で、前回比3.1ポイント増の66.6%だった。

対中関係は、政治的關係が冷え切っていた小泉政権時代よりも数字の上では悪化しており、外務省は、中国製冷凍ギョーザ中毒事件をきっかけとする中国製品への「食の安全」の関心が影響しているとの見方を示している。

미일관계가 좋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각부가 6일에 발표한 「외교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좋다」라는 답은 68.9%로 작년 10월 조사보다 7.4% 떨어졌다. 이는 설문 항목이 만들어진 평성 10년 이후 처음으로 70%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반면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답은 7.7% 증가한 28.1%였다.

외무성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일관계는 「좋다」가 전보다 2.7% 떨어진 23.7%로, 반대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3.9% 증가한 71.9%로, 70%대를 돌파했다. 「중국에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도 과거 최고로, 이전 조사보다 3.1% 증가한 66.6%였다.

추천 논문

### 2008년 4/4분기 한반도 안보지수(KSPI) 조사 결과

삼성경제연구소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상황은 국내거시경제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2005년부터 한반도 안보상황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한반도 안보지수(KSPI : Korean Peninsula Security Index)]를 개발하여 매 분기별로 조사, 발표하고 있다.

KSPI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는 50점을 기준으로 이상은 호전, 이하는 악화, 50은 변화 없음을 의미한다. KSPI조사는 2008년 3/4분기 당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입증한 바 있다.

2008년 11월(4/4분기)에 실시한 한반도안보지수의 「종합현재지수」는 3/4분기 대비 0.54p 하락한 45.84를 기록하였다. 종합현재지수는 2007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하락해서 2008년 3/4분기부터는 50선을 밑돌고 있는 중이다.

지수를 하락시킨 설문 중 ‘북한체제 내부안정성’이 49.31에서 38.46으로 악화된 것이 눈에 띄는데, 그 이유는 이 항목을 구성하는 하위문항 가운데 ‘북한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이 48.96에서 39.74로, ‘북한의 군사적 안정성’이 49.32에서 47.44로 다소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적 안정성’은 42.36에서 44.87로 소폭 개선되었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아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시위를 이유로 불안하게 평가됐던 ‘한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은 41.03으로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50 이하로 불안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수를 하락시킨 설문 중 ‘북한체제 내부안정성’이 49.31에서 38.46으로 악화된 것이 눈에 띄는데, 그 이유는 이 항목을 구성하는 하위문항 가운데 ‘북한의 정치사회적 안정

성’이 48.96에서 39.74로, ‘북한의 군사적 안정성’이 49.32에서 47.44로 다소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적 안정성’은 42.36에서 44.87로 소폭 개선되었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아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시위를 이유로 불안하게 평가됐던 ‘한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은 41.03으로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50 이하로 불안요인으로 나타났다.

2009년 1/4분기를 예측하는 종합예측지수도 종합현재지수 평가 결과와 같은 이유로 47.40을 기록했다.

본 조사는 2008년 미국 대선 직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6자회담 관련국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미국 새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이에 맞춰 주요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지수의 추이에서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07 4/4	2008 1/4	2008 2/4	2008 3/4	2008 4/4	2009 1/4
종합현재지수	53.76	51.67	51.23	46.38	45.84	-
종합예측지수	50.69	53.74	52.64	51.33	47.37	47.40

첫째, 참여정부의 마지막이었던 현재지수 2007년 4/4분기 53.76과 예측지수 2008년 1/4분기 53.74를 정점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현재지수와 예측지수가 모두 경향적 저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는 뜻이다.

둘째, 예측지수보다 현재지수가 더 나쁘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현실은 더 나빠지고 있음을 뜻한다.

#### 함께 보는 최근 북안 단신

##### 북한, ‘우리 김치, 몸에 좋다’고 선전

○ 12.4. 중앙통신은 “조선의 전통적인 민족음식인 김치는 그 맛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약효 또한 높다”면서 “김치에는 다당류와 리그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비만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크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김치에 들어가는 고추와 마늘의 생리활성물질들은 세포의 노화방지와 유해로운 균의 사멸, 진통완화, 면역증강 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 “배추 1포기에 찹쌀이를 40g정도 넣으면 강심작용, 혈압강하작용, 혈관확장, 콜레스테롤의 흡수방지, 동물지방식품의 소화촉진 등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다.